

삼성전자 노조 파업 앞두고 정치권서도 비판 여론...막판 타협 가능성은?

등록 2026.05.04 11:04:30 | 수정 2026.05.04 21:03:29



[평택=뉴스시스] 김근수 기자 =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ks@newsis.com

[서울=뉴스시스]이지용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업 시점이 임박하면서 노조를 향한 '자제' 요구와 경고성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기존 주주와 학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파업이 가까워질수록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부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지탄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언급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 움직임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성과를 경영진과 근로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도체 생태계 전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삼전 노조의 행태는 과도한 요구이며 경영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으며, 박용진 전 의원은 "전문학적 이익을 두고 내부 갈등에 몰두하는 모습이 불편하다"며 노사 모두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양한 입장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노조 파업을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글로벌 고객 신뢰도 하락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안정적 공급을 중시하는 만큼 장기적 영향도 우려된다.

노조는 파업 시 최대 30조원 규모 피해를 추산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공급 안정성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서울=뉴스시스] 조성우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6.04.30. xconfind@newsis.com

이 같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양측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다면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규복 전 반도체공학회 회장도 "양측 모두 파업의 타격을 잘 알고 있어 파업 이전에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으로 회사 이익이 줄면 노조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적절한 타협안 도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